

직업소명론 입장에서 본 기독교 정당 논의 비판

이장형 (백석대 교수)

I. 서론

II. 기독교 정당 논의의 긍정적 측면

III. 역사 속에서 본 정치와 종교의 관계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IV. 기독교 정당 지지자들의 문제점

V. 확대되어야 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 ABSTRACT •

Whenever there is general election in Korea, the issue of Christian political party repeatedly causes great debate among Korean people,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This being the case, it seems worthwhile critically to reflect on the debate of the issue. The problem is politically enthusiastic Korean Christians who want to get involved in secular politics tend to overlook a more important political responsibility of Korean Christians.

After all,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the church lies at the center of the issue of church and politics and the argument for the need for Christian political party in Korea can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re is an implausible leap from Christian soci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to political party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some politically enthusiastic Christians. Their arguments for the politics of service, servant-hood of political leadership, and non-power oriented or anti-power politics as opposed to power-oriented nature of current Korean politics are contradictory.

2) In view of opposition among most Korean Christians to the Christian political party, anti-Christian sentiments in Korea, and the decline of Korean Christianity, an attempt to organize a Christian political party seems to be highly inappropriate.

3) The concept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as already taken root in Korea and this principle should be respected in multi religious Korean society where major religion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etc. coexist peacefully.

The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in Korea cannot be best exercised when they try to organize a Christian political party, but when Christian churches become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and Christianity becomes what it is intended to be.

Key words: General election, Christian Political Party in Korea,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the state, multi religious, Christian churches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교수의 실제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말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폴리스찬(polistian)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 정당을 본격적으로 창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사실 소속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정당의 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정당은 이미 있어 왔다.¹⁾ 그런데 2012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논의 및 활동들이 다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창당 움직임을 주도하는 자들과 이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지명도, 교단적 배경과 입지, 언론과 사회의 반응 등을 놓고 볼 때 그 성과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독교 정당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 왔고, 여전히 상당한 논쟁점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기독교 정당에 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런 논의가 신학적으로 다소 진부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기독교인이 정치를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로 실제적인 이유 및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실제적인 이유란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일어난 끔직한 일들과 특정지역의 민주화 운동 등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

1) 2011년 10월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22개인데, 정당명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3개이다. 기독교사랑실천당(기독교당) '04.3.26 등록, 기독교자유민주당(기민당) '11.9.26. 등록, 한국기독교당 '11.8.8등록.

적한 것이다.²⁾ 필자는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을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론 및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기독교 직업소명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³⁾

II. 기독교 정당 논의의 긍정적 측면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 논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던 한국교회, 특히 보수교단의 지도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의식의 진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시민사회의 권리에 관한 주장이나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사회, 문화의 제 문제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1980년대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종교적 권리 운동 등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은 공명선거와 관련된 시민운동, 대북 지원사업 등이 보수 교단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팀 러헤이(Tim La Haye)는 “진정으로 영적 부흥으로 가는 길은 의회를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 했다.⁴⁾ 그러나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기독교 정당의 창당

2) 이런 시각은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BakerBooks, 2008), 에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이 문제와 관련한 포럼이 지난 2011년 10월 14일 미래목회포럼 주관으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고,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국민일보 10월15일자 참조) 찬성 측에서는 신성종목사, 전광훈목사, 김총립 대표가 참석했고, 반대 측에서는 손봉호교수, 정성진목사와 필자가 참여하였다.

4)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BakerBooks, 2008), 16.

또는 목사가 정치계로 진출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당 명칭에 기독교 관련 이름이 들어가고 목사가 책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이념, 기독교 세계관적 바탕 위에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우선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보편화된 만인제사장직과 직업에 대한 소명적 이해는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고 강점이다. 목사가 전문적인 것처럼 정치인도 고도의 훈련과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다. 이런 면에서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 정당을 만들고, 당의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감상적인 발상으로 보여 진다. 직업소명론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정치와 관련하여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급부상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및 관심, 시민단체 출신후보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변호사 등의 경우 여론 및 언론 미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발생한지 꽤 지난 문제가 공지영 원작의 ‘도가니’란 영화를 통해 장애인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발시킨 예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정당을 부각시키는 것은 기독교 전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함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⁵⁾

5)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독교 방송매체인 CBS, CTS 등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미디어는 공중파 방송과 SNS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콘텐츠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I. 역사 속에서 본 정치와 종교의 관계

기독교 정당 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된 사회의 발전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 정착되기 전에는 소위 ‘제정일치’의 사회가 전개되었고, 그런 경우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때가 많았다. 즉 정치가 종교를 주도할 때도 있었고, 종교가 정치적 힘을 갖고 끌고 가는 때도 있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이 ‘교회 밖의 일에 대한 주교’임을 자처했고, 국경은 곧 교회 교구의 한계와 일치되는 상황이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참 신국의 실현자요 교회의 확립자라며 그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의 황제가 떠난 뒤에는 영광과 권위가 로마의 주교에게 전이되는 때도 있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교회,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빛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⁶⁾ 특히 서방제국에서는 동방제국과 달리 교회가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독일의 주교 임명 문제로 황제 하인리히 4세와 이견이 있었는데, 독일 황제를 파면하며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장식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 바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신정(神政)이 종교를 타락시키는 악마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 마틴 루터는 종교와 정치의 두 왕국이 다 하나님께 제정하심

6) 이장식, 「종교와 정치」, 기독교사상편집부 편, 『한국의 정치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3), 262.

것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고,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그는 자기 교회의 사무행정의 많은 것을 국가행정기구에 맡겼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정치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게 하는 일에 주력하였다.⁷⁾

정교분리란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disestablishment인데 국가에서 국립 종교(교회)를 없앤다는 뜻으로, 특정 종교가 국가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종교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교회 등의 종교 단체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쓰일 때가 많다. 특히 이 말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식민지 노예제 폐지, 선거법 개정, 곡물법 폐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던 것처럼 사회의 부정을 추방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논의도 미국 및 한국의 경우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의 경우는 협의의 정교분리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치와 종교 또는 정부와 교회가 최소한의 행정적인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양자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주장한다. 그 까닭은 정치와

7) 위의 책, 263.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현실 가운데서 종교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 생활은 물론 그들의 갖가지 사회생활과 활동,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정신 및 도덕적 규범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⁸⁾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 및 정치의 종교적 중립론이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식 교수는 정치와 종교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위 조절론(accomodation theory)을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나라의 법을 만들 때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국민의 종교심과 도덕심을 해치지 않을뿐더러 그런 것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될 때 정치와 종교는 충돌이 있을 수 없고 협력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다.”⁹⁾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회가 정치세력화 되어 2000년 초 부시 정부의 출현에 큰 역할을 했고, 이런 양상은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결국 현대사회는 전에 비해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과 태도는 그 입지와 권위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한국교회는 1901년 예수교선교공의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의 국가에 대한 관여를 금기시하는 신앙적 태도를 배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교분리의 원칙들은 1895년 을미사변

8) 위의 책, 267.

9) 위의 책, 268.

10) 김진호, 「한국교회의 '신앙적 식민성'이라는 문법」, 『기독교사상』, 제51권 제11호, 2007, 11, 70.

이후 한국과 일본의 충돌 등 계속되는 일제의 침략기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위협 앞에서 조선 교회의 존립을 지켜 내기 위해서 정교 분리의 명분을 갖고 교회에 대한 불간섭을 확보해야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경배 교수는 선교사들이 1905년 조선에 단독 교회를 형성하려다 교과교회로 분산시키게 된 것도 전국 규모의 교단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¹⁾

선교사들의 활동을 볼 때 알렌의 경우는 의사의 자격으로 입국을 했고 후에 외교관으로 전직을 했기에 차치한다하더라도, 대표적인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고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생일인 만수성절 기념식을 교회가 앞장서서 치러주는 등 좋은 관계 형성에 주력했다. 삼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척한 것은 일제의 야만스러운 진압방식이었지 일제 강점 그 자체의 부당성은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당시의 미국도 식민지를 가진 나라였기에 그런 기대는 무리일 수 있으며, 추후에도 선교사들은 ‘선교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192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떠났던 것도 이런 교회의 소극적인 정치 참여와 한계와 관련된다 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하는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정교분리의 신앙과 헌법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안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즉 당시에는 정교분리의 신앙이 신앙적 덕목 혹은 사회적 상식으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볼 수

11) 민경배, 「교회와 국가」, 『신학논단』, 제25집 1997.6. 118 참조.

12) 한규무, 「선교의 역사적 반성과 오늘의 방향성 모색」, 『기독교사상』, 제49권 제9호, 2005.9. 54

있다.¹³⁾

김권정 교수는 1901년 장로교공의회의 ‘정교분리선언’을 역사적 컨텍스트 맥락에서 소개하면서, 특히 네 번째 항목이 교회라는 집단과 교인이라는 집단을 구별하면서 접근하여 교회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교회의 비정치화 선언은 교인의 정치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회라는 집단은 정치운동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⁴⁾ 이와 관련되어 1907년 조직된 비밀결사체인 신민회도 기독교 단체는 아니었지만 상동청년회, 기독교 신흥상공업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라는 면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07년도에 전개된 대부흥운동 역시 정교분리의 교회적 전통을 고착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선교사들은 한일 양 국민 간의 악화되어 가는 관계가 전국적인 거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비정치화(非政治化)를 단행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선교협의회가 결의하였던 단일 민족교회 형성 안을 폐기하고 그들이 본래 가지고 들어왔던 경건주의적, 청교도적 엄격 규율의 열정적인 신앙을 부흥하기 위해 일단의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¹⁵⁾ 민경배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하류층 서민층을 서구 기독교의 금욕윤리(禁慾倫理)에 의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책임 시민으로 형성해 가며, 계층의 상향적 이동을

13) 김진호, 위의 글, 68.

14) 김권정, 「초기 한국기독교의 ‘정교분리’문제와 사회참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79호, 제255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 2007.6.2., 55.

15) 민경배, 앞의 책, 118.

수행해 나간 것이 바로 교회였다. 이 ‘네비우스 방법’은 자립, 자급, 자립선교와 같은 강력한 자립적 주체 의식을 사회 하류층과 근로층을 상대로 한 선교에서 북돋아주었다. 이것이 곧 바로 이들을 교육하여 한국적으로 틀을 잡게 한 후, 자립하고 공헌하고 인도하는 개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제까지 없었던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 곧 의식과 책임의 주체로 나라와 겨레에 관여하는 창조적인 인간상을 꾸며낼 수 있었던 것이다.¹⁶⁾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논하게 될 때 지적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으로 세속 정치에 참여하려는 기독교인의 열정이 교회가 지닌 더 심오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인들의 관심을 사회 정의에 집중시키는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와 정치가 지닌 도덕적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교회와 정치’란 문제의 핵심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다. 조용훈 교수는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정치적 책임은 우선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달리 말해 정교분리원칙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진 조직체이다. 국가가 외적 평화와 질서에 관심을 쏟는다면, 교회는 영적 진리와 구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하거나 근본적인 비판적 안목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치에의 참여 동기와 교회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16) 민경배, 앞의 책, 16.

17) 조용훈, 「정교분리원칙에서 본 최근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문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집, 2009, 321-323 참조.

IV. 기독교 정당 지지자들의 문제점

한국사회에서 소위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공통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기독교인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기독교 정당 지지자들의 정당 창당 및 운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비약이 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과 기독교 정당 설립의 당위성 사이에도 심각한 비약이 있다. 그들 가운데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제시 하면서 니버가 역설한 다섯 가지 모델 중 다섯 번째 모델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정당이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¹⁸⁾ 즉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당을 적극적으로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중시한다면, 이를 근거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이론은 리차드 니버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니버는 개혁신교회 대부분의 전통이 그런 것처럼 정치를 포함하는 문화의 영역과 현존하는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영역상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정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한 영역이 있으며, 신앙과 교회는 혼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하는 특수성이 있다.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모델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에 합당한 원리로 끌어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정당 명칭에 기독교를 넣고 교회의 직분자들 중심으로 당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와는 분명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18) 미래목회포럼에서 2011년10월14일 주최한 14차 정기포럼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참가자 신성종 박사는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 기독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직업’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공헌 중 하나는 ‘일’과 ‘직업’의 의미를 되찾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가정, 국가, 직업,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이루는 주요 기관으로 보았다. 이런 면에서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기에 그는 ‘만인제사장’ 직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서 직업에 관한 성숙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원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der geistliche Stand)이라고 불고 영주들, 군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층(der weltliche Stand)이라고 부르는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따위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충심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진실로 영적 계층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무상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¹⁹⁾

물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은 신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삶의 태도나 지향이라는 총체적인 면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직업 그 자체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현장에 서 보면 여전히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갖고 직종을 구분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앙인들부터 일가 직업과 관련된 자세를 분명히 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²⁰⁾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보

19) 마르틴 루터, 원당희 역,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세창미디어, 2010), 18.

20) 뱌전 2:9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도 직무에 관한 차이이지 결코 신분적인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루터의 직업 이해에 관해 막스 베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신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삶의 짧은 순례 길에서 직업의 종류를 중요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 점점 세상사에 연루되면서 그는 직업노동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루터에게 각 개인의 구체적인 직업은, 점차 신의 섭리가 그에게 지정한 바로 이 구체적인 지위를 수행하라고 신이 개인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이 되어갔다.²¹⁾

앞에서 살펴 본대로 개혁신교회의 주요 전통인 만인제사장직 입장에서 모든 직업은 전문성과 수월성을 갖는 하나님의 소명이며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귀한 것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필요하며 개별적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할 영역이다.

2. 현재의 정치가 권력 지향적임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정당은 섬기는 정치, 봉사의 정치를 추구할 뿐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다. 정치는 그 무엇보다 권력을 바탕으로 한다. 기독교 정당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창당 및 운영된다면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를 만들어야지 현실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치는 힘을 바탕으로 한다. 정치는 고도 발달된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힘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인 생각이며 논

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1)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도서출판 길, 2010), 128.

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이다.

정치의 특징 중에서 현실성과 규범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치가 현실성을 갖는다는 것은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규범성은 사상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 정당을 추진하게 되면 신앙은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기독교와 정치가 연합 또는 야합할 때에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했음을 보게 된다. 기독교란 종교가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정치화는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이식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는 기독교의 영향력 약화 및 계도화 즉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좀더 전문화된 책략과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계 현장에 열정만 갖고 참여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성과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만 훼손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신앙인들이 지혜롭고 신실하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이 점에 대해 로날드 사이더는 성서 계시에 기초한 규범의 체계화와 사회에 관한 세심한 분석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더는 규범적 체계화, 사회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 정치철학 정립,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회 분석의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²²⁾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논의하는 문제들과 방식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치의 선진화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정치철학을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더는 그의 방법론에서 ‘규범적 체계화’를 언급했는데, 규범이란

22) Sider, Ronald J.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BakerBooks, 2008), 41-45참조.

도덕적 결정의 기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선하고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혹은 철학적 규범의 체계화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성서적인 전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서의 이야기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성서주의(Biblicism)에 빠지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기독교 공동체의 논의에 있어서 신학의 출발과 그 논의의 근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인간들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보충 자료나 이야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성서는 정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규범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규범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철학은 일종의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철학은 성서적 자료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관련시켜 보게 해주는 일종의 로드맵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정치 참여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누구를 위한 어떤 규범에 의존하는 정치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²³⁾

1965년까지만 해도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제리 폴웰(Jerry Falwell)은 시민권리 시위에 빠져 있는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복음은 외부세계를 정화하기 보다는 내면을 재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3)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필자의 「기독교의 정치참여 방법론과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에서 논의 및 기술된 바 있음.

그 후 15년이 지난 1980년에는 로날드 레이건을 도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종교적 권리’(Religious Right) 운동 등이 전개 되었다. 많은 근본주의자들, 신학적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은 기독교인 정치지도자들이 선출되기도 하였다. 잠비아에서는 내각에 목사들이 임명되면서 ‘기독교 국가임이 선포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 고문, 부정 부패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 기간의 정치적 참여해 대해 프레스톤(Freston)이 평가한 바 있다. 그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정치 참여에 있어서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잘못된 정책, 심각한 부패 등이 만연한 경우가 많았다. 즉 많은 경우에 열정이 앞섰을 뿐 세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는 체계적인 기독교 정치철학은 결여되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서에서 칭송받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비난받는 것들은 금지되어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²⁴⁾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정치 참여로 나아가면서 성서적 정치윤리의 가르침이 수반되지 않는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문화에 감염되기 쉽다고 한 프레스톤의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팽배해 있고, 실제적인 교회 성장도 멈춘 한국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기독교정당의 출현은 지극히 부정적인 일이다. 즉 이론적, 신학적 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지극히 현실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기독교 정당 창립은 선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서 소수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www.kci.go.kr

24) Sider, Ronald J.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BakerBooks, 2008), 17.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기독교 정당이 창당되어서 선거에 임할 때 기독교인 입후보자들이 당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발표한 미래목회포럼의 성명서에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스스로 갱신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개혁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²⁵⁾ 이런 성명서가 발표된 데에는 현재 한국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사회의 자성과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는 일, 즉 교회됨과 목사됨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일이 한국 기독교의 우선적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정치’를 사회의 변혁 문제에만 연관 지어서는 안 되며 교회를 향해 던져야 할 결정적인 ‘정치적 질문’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달리 말해 교회는 과연 기독교적 확신이라는 핵심 내러티브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또한 기독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 탄압에 악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선진화된 모습으로 정착된 형태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세계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다원 종교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점이다. 만약 이런 다원종교 상황 가운데서 제 종교가 저마다의 종교 관련 명칭을 가진 정당명을 표기하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우며, 종교 전체에 대한 반감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 정당을 추구한 기독교가 갈등 유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5) “미래목회포럼 ‘개신교 정당반대’”, 〈조선일보〉 2011.09.02.

26) Stanley Hauerwas, 『교회됨』 문시영 옮김, (북코리아, 2010), 17.

문화권을 달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구체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직 선교가 확대되고, 선교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정권을 창출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기독교 정당 창당은 선교의 방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목사들이 기존의 지명도 등을 믿고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게 되는 경우 일정 부분의 득표와 당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상황이 된다면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되거나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 헌법은 정치인과 현직 목사의 이중직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럴만한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 목사직은 내려놓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 것이다.

V. 확대되어야 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은 정당 관련 논의에 한정되거나 굳이 정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때에만 제대로 감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교회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 및 영향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영역에서 신장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기독교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는 정당의 창립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과 기독교의 기독교 됨이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즉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존 칼빈이 제네바 시정을 담당하였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경우는 특별하고 매우 제한적인 경우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이승만 정부, 미군정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구체적으로 목사들이 관료 등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인력풀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서구사회에 기독교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정당 정치의 역사가 길다. 실제적으로는 국교로 지정된 국가교회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기독교 혹은 크리스천이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종교적인 심각함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현 시대의 정치인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자리매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먹이사냥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가장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종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정치력은 기독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공동체와 삶에 주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됨을 통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 창당 등의 소모적인 논쟁과 논의를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력과 직업소명론의 재해석과 강조에 따른 책임 감당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권정. 『초기 한국기독교의 ‘정교분리’ 문제와 사회참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79호. 제255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 2007. 6. 2.
- 김소영. 『한국의 정치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4.
- 김진호. 『한국교회의 ‘신앙적 식민성’이라는 문법』. 『기독교사상』 제51권 제11호, 2007.
- 민경배.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민경배. 『교회와 국가』. 『신학논단』 제25집, 1997.
- 이영현. 『한국 기독교사』. 컨콜디아사, 1983.
- 이상식. 『종교와 정치』. 기독교사상편집부편. 『한국의 정치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3.
- 조용훈. 『정교분리원칙에서 본 최근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문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집, 2009.
- 한규무. 『선교의 역사적 반성과 오늘의 방향성 모색』. 『기독교사상』 제49권 제9호, 2005.
- 마르틴 루터. 원당희 역.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세창미디어, 2010.
- 막스 베버. 김덕영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도서출판 길, 2010.
- Will Kymlicka. 장동진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 Stanley Hauerwas. 문시영 옮김. 『교회됨』. 북코리아, 2010.
- John Howard Yoder. 신원하·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IVP, 2007.
- Jim Wallis.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살림, 2009.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하영선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6.
- Pasewark, Kyle A. *A Theology of Power: Being beyond Domination*. Fortress Press, 1993.
- Sider, Ronald J.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BakerBooks, 2008.

Smith, Michael Josep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Jim Wallis, 『God's Politics』, Harper SanFrancisco, 2005.

“미래목회포럼 ‘개신교 정당반대’”, 〈조선일보〉 2011.09.02.

논문투고일: 2011. 10. 31

심사개시일: 2011. 11. 18

게재확정일: 2011. 12. 17

• 국 문 초 록 •

기독교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는 정당의 창립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과 기독교의 기독교 됨이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먹이사냥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가장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종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정당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기독교인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기독교 정당 지지자들의 정당 창당 및 운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비약이 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과 기독교 정당 설립의 당위성 사이에도 심각한 비약이 있다.
2. 현재의 정치가 권력 지향적임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정당은 섬기는 정치, 봉사의 정치를 추구할 뿐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다.
3.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팽배해 있고, 실제적인 교회 성장도 멈춘 한국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기독교정당의 출현은 지극히 부정적인 일이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정치력은 기독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공동체와 삶에 주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됨을 통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 창당 등의 소모적인 논쟁과 논의를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력과 직업소명론의 재해석과 강조에 따른 책임 감당이 필요하다.

주제어: 기독교, 정당, 정치, 기독교 정당, 정교분리, 교회, 직업, 직업소명, 칼빈